

# 공노총, 정년 일원화·고시 폐지 나서

## 합법노조 설립 신고...대정부 교섭 본격화 시정료 폐지 등 비교섭과제 논란일 듯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공노총)은 4일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대정부 교섭에 나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를 위해 대국회 교섭권과 공무원수준의 단체행동권 등 158개 교섭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새로운 노동운동의 하나로 정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위해 9개 분야 32개 항목의 비교섭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섭과제로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돼 있는 현행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공노총은 설명했다. 공노총은 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 후 2~3일 이내에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정부에 대해 교섭을 공식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국회 교섭권 등의 교섭과제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 유류세 대폭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고등고시제도 폐지, KBS 시청료 폐지, 휴대전화 사용료 대폭 인하

등 비교섭 과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교섭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단체행동권 요구는 공무원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 데다 대국회 교섭 요구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저촉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입장이다. 합법노조인 공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은 노조가입대상인 6급이하 29만명중 3만4천700명으로 11.8%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쓰리엠이 주는 교훈



이종태  
경제부 차장

최근 쓰리엠(3M)이 나주에 여섯번째 공장을 준 공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3M은 미국 3M의 자회사다. 그러나 3M이 스키 카치 테이프나 포스트잇 같은 사무·생활용품을 팔아 연간 20조원을 벌어들이는 거대기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설립 104년 만에 전세계 50여개국에서 물경 4만5천여종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3M의 성공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닌 기술혁신이다. 매일 1.4개의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3M의 힘은 근무시간의 15%를 개인 아이디어에 쓰라는 '15% 룰', 최근 1년내 개발한 제품으로 매출의 10%를 올린다는 '10% 원칙',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만을 위해 조직을 따로 만드는 '제품 챔피언'제도 등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나왔다고 알려진다. 혁신을 동반한 원천기술 개발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광주·전남지역의 현실은 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역내 24개 창업보육센터 대다수 입주업체들의 경우 외국에서도 짝짝 놀랄만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생산자금이나 마케팅 역력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해외 관련업체와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나, 운전자금이 부족해 자칫 제품이 사장될 위기다.

전남지역의 한 농업벤처사업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에서 뺀 성분은 제거하는 '탈산'기술과 고급 아이스홍시를 개발, 농림부가 선정된 신지식인으로 '주앙'받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기술 임업'을 부르짖는 지자체나 대출금 회수가능성만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금융기관이 있는 한 지역기업의 생존이나 다른 지역과의 경쟁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지자체나 기업지원기관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단 한 개의 신기술, 한 개의 기업을 살린다는 책임있는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기관들도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는 '햇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기업의 향후 성공가능성을 실질적인 대출자재로 확대해야 한다. 3M이 운용하고 있는 '년 테뉴어 그랜트(None-Tenure-Grant)' 즉, 사업성은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지닌 신참연구원에 게 두둑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타산지식'이 됐으면 하는 심경이다. /jtlee@kwangju.co.kr

### 공노총은 어떤 단체

### '불법' 전공노와 달리 노조법 따른 합법 조직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 신고를 한 뒤 활동을 하는 합법노조인 반면,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의 공무원단체로서 단체행동권·정치활동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법안에 반대,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해 '불법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 전남 자치단체장 관사 평균 49.1평

### 관리비 대부분 예산서 충당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관사의 평균 면적은 49.1평이고, 관사 관리비는 대부분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행·의정감시 전남연대(공동운영위원장 이상석)에 따르면 전남도 및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공개한 자료 집계 결과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17개 시·군이 자치단체장 관사를, 14개 시·군은 부단체장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목포의 경우 시장 관사가 아예 없었으며 나주시의 경우 시장 관사를 주요 인사 숙소 및 시민간담회 장소로 활용, 타 시군과 대조를 보였다. 이들 관사의 건물 기준 평균 연면적은 자치단체장 관사가 49.1평이었고 부단체장 관사는 31.7평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지사 관사는 127평이었고 군수가 기거하지 않는 영광의 경우 부지 300평에 건물 면적은 75평이나 됐다. 관사 관리비로는 연간 100만~700만원, 많게는 1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담당군수가 관리비를 자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에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의정감시연대 관계자는 "민선 들어 단체장들이 관사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인데도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은 유지하거나 새로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전공노사무실 22일까지 철거

###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노조 자진탈퇴 등 유도키로

자치단체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이 오는 22일까지 완전히 철거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들은 4일 행정자치부에서 회의를 갖고 행정자가 불법공무원단체의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노조 자진탈퇴 ▲회비 원천공제 금지 ▲전공노 사무실 폐쇄 등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 부단체장들은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오는 22일까지 계고장 발부 등 사전철거를 모두 마친 뒤, 자진폐쇄하지 않은 자치단체 내 노조사무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 아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폐쇄토록 할 계획이

다. 이 같은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미이행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공노 사무실 폐쇄 대상 기관은 총 162개이며 이중 경남과 경남농업기술원, 서울 서초, 경기, 예산, 장성, 서귀포, 산청, 울주 등 9개 기관만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주동자 및 지도부는 중징계 및 사법조치 요구할 계획이며, 일반 노조원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이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연합뉴스

## "금지기간에도 축산폐수 반입"

### 광주시의회 이상동의원, 환경시설공단-K위생업체 결탁 주장

축산 폐수의 반입을 금지했던 지난달 23일부터 31일 사이에도 일부 분뇨 등 처리업체가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위생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은 지난 1일 시정질의와 4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K위생업체가 축산폐수를 위생처리장으로 불법 반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업체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적한 도로에서 축산폐수를 일반 수거 차량에서 분뇨수거 차량으로 옮겨 실은 뒤 위생처리장으로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사실을 K업체 관계자와 축산폐수를 분뇨차량에 옮겨 실다가 가스에 질식돼 입원했던 인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축산폐수를 불법 반입

하다가 문제가 돼 광주시가 반입금지시간에도 이처럼 위생처리장에 불법반입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시설공단 측의 묵인이라는 불가능하다"며 업체와 환경시설관리공단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K업체 측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윤계 실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기간 동안 위생처리장에 반입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 측에 그렇게 대답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구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광주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 불법 반입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일자 지난달 23일 축산폐수 반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반입을 유보하도록 조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금고 경쟁입찰

### 시의회, 지정·운영조례안 통과

광주시금고 선정에 경쟁입찰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쟁입찰(경쟁방법)을 통해 시금고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돼, 이변이 없는 한 1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수의방법)으로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고, 특별회계법 등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

록 했다.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했다. 조례안은 또 금융기관 1곳만 입찰에 참여하거나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친 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 외에 금융기관이 시금고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면 경쟁입찰을 통해 시금고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 시 금고 결정 및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